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2면	"시군연합회 유기적 협력 강원농업 발전 앞장"	1
江原日報	21면	회원 역량 강화·유기적 협력 '행복한 농촌 만들기' 앞장	2
江原日報	02면	공공기관 '2조9천억' 대규모 발주 ... 강원 건설경기 기지개	2
江原日報	01면	"건설산업 지원은 강원경제 활성화 마중물"	3
강원도민일보	03면	질의하는 심오섭 의원	4
江原日報	03면	강원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통과	4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심사	5
강원도민일보	15면	"영월 텅스텐 광산 재개발 국책사업 전환 필요"	5
亞洲經濟	온라인	심영곤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	6
신아일보	온라인	심영곤 의원, 강원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발의	7
스포츠서울	온라인	김기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8
亞洲經濟	온라인	김기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	9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도의회 기행위, 이희열 신임기조실장 업무보고	10
에너지경제	온라인	[포토뉴스]이희열 신임 기획조정실장, 기행위 첫 주요 업무...	11
위클리오늘	온라인	[위클리오늘] 조성운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기...	12
뉴스쉐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기...	13
강원네트워	온라인	박대현 도의원, 공공위탁 조례 제정 추진	14
m 明報日報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박대현 도의원, 공공위탁 조례 제정 ...	15
江原日報	온라인	정종성 화천문화원장 취임식	16
강원도민일보	01면	지역소멸 '바로미터' 폐교 발생 시계가 빨라진다	17
江原日報	15면	정선 '유치원 초·중·고' 우유 무상 급식 박차	17
강원도민일보	04면	도-교육청 '러닝메이트제 도입' 첫 논의부터 온도차	18
江原日報	14면	"장성광업소 갱도 수몰 반대" 대정부 투쟁	18
강원도민일보	04면	2학기부터 늘봄학교 행정 공무원 채용 검토	19
江原日報	10면	춘천시내~기업혁신파크 가는 길 편해진다	19
강원도민일보	09면	"소양강댐 물 뺏길라" 방어 나선 춘천시	20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 지정면 인구 3만명 돌파 신도심 탄생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철도 국가사업 관철돼야	2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상가 임대료 연체율 2배 많아 우려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의대 증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전환점 돼야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폭설에 산양 떼죽음, 긴급 구호 대책 시급하다	24

강원도민일보

2024 03 07 ()

22



한국농촌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종순)는 6일 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신영재 흥천군수, 임상현 도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22대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시군연합회 유기적 협력 강원농업 발전 앞장”

김종순 농촌지도자 도연합회장 취임

한국농촌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임원 이취임식이 6일 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신영재 흥천군수, 임상현 도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22대 한국농촌지도자도연합회를 이끌 임원진은 김종순 회장, 박문일·엄주익·조남명·이용진·이옥금 부회장, 박재갑·강일수·김봉선 감사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년간 도연합회를 이끌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21대 곽달규 회장과 도임원들에게

도지사 공로패가 전달됐고 이임하는 14개 시군 연합회장단은 재직기념패를 받았다.

김종순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사회의 선도자로서 농촌지도자회의 위상 제고와 회원역량 강화로 강원농업 발전과 단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군연합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또한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임하는 곽달규 회장도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선도자로서 농촌지도자회의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농업 예산 편성과 농업 발전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했다. 김정호

회원 역량 강화·유기적 협력 '행복한 농촌 만들기' 앞장

농촌지도자도연합회 김종순 회장 취임·임원진 선임

한국농촌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가 2024년 강원농업 발전과 행복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국농촌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회관 3층 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유상범 국회의원,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22대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순 회장이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김 회장은 한국농촌

지도자 중앙연합회 감사, 한국농촌지도자 흥천군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강원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김 회장은 "지역사회의 선도자로서 농촌지도자회의 위상 제고와 회원 역량 강화를 통해 강원농업 발전과 단체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시·군 연합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또한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문일(삼척), 엄주익(영월), 조남명(인제), 이용진(횡성), 이옥금(평창) 부회장과 박재갑(동해), 강일수(원주), 김봉선(양구) 등 임원진도 함께 취임했



◇한국농촌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제21·22대 임원 이·취임식이 6일 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열려 김종순 신임 회장과 곽달규 이임 회장,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신영재 흥천군수, 임상현 도농업기술원장 등 내빈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박승선기자

다. 신임 회장단은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임하는 곽달규 회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분 모두에

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선도자로서 농촌지도자의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그동안 강원도 농업농촌을 위해 애써

주신 곽달규 전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김종순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반값 농자재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예산 지원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

공공기관 '2조9천억' 대규모 발주 ... 강원 건설경기 기지개

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동시 진행

강원지역 건설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주요 발주기관들이 올해 대규모 발주에 나선다.

'2024 강원건설건축박람회' 개막 첫날인 6일 춘천 볼내체육관에서는 '2024 강원 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가 동시 진행됐다.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원주·강릉·삼척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교육청, 강원개발공사 등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올해 건설공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참여기업들의 홍보 기회를 늘린 것이 차별점이었다. 본격적인 기관 발주계획 발표에 앞서 1부에서는 (주)이수, (주)국제스틸, (주)월드케미칼, (주)지혜안전 등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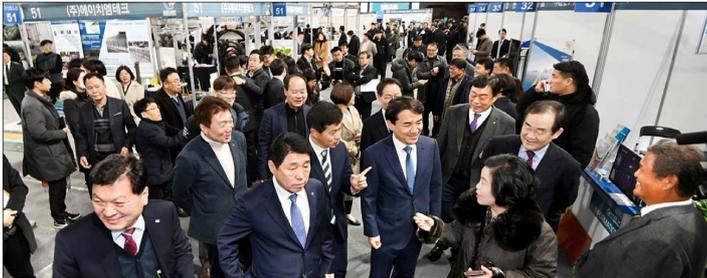
8개 유관기관 담당자 직접 발표 참여 기업 홍보 기회 확대 눈길 "연결 플랫폼 역할 톡톡" 호평

개 기업이, 2부에서는 (주)에이치엠테크, 현대파크, 제이씨건설 등 3개 기업이 단상에 올라 제품과 시공법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기관 관계자들은 업체 이름과 제품 특징 등을 메모하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 순서는 본격적인 발주계획 설명회로 넘어갔다. 각 기관 발주사업 담당자들은 미리 준비한 자료화면을 띄우며 올해 진행될 핵심 사업과 전체적인 발주 건수, 액수 등을 소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박람회와 발주계획 설명회 동시 개최에 대해 참여업체들은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장흥균 (주)국일종합건설 대표는 "발주계획 설명회를 위해 현장을 찾았던 기관 발주 담당자들이 한 번이라도 더 업체 상품을 둘러보고 가는 효과가 있다"며 "업체와 수요처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김영범 (주)가나 대표는 "발주계획 설명회부터 업무 연관회까지 참여기업 입장에서 공공기관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 같아 만족스럽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4 강원건설건축박람회는 8일까지 춘천 볼내체육관에서 이어진다. 도내 우수 건설·건축업체들이 신기술, 신제품을 선보이는 '기업관'과 지자체·기관들이 상담을 진행하는 '비즈니스관'으로 구성되어 관료는 무료를. 김현이기자



◇2024 강원건설건축박람회 개막식이 6일 춘천 볼내체육관에서 열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허영 국회의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육동현 춘천시장, 최상순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이영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등 참석 인사들이 기업의 홍보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박승선기자



◇2024 강원건설건축박람회 개막식이 6일 춘천 불내체육관에서 열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허영 국회의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최상순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이왕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등 내빈들이 개막을 축하하는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박승선기자

“건설산업 지원은 강원경제 활성화 마중물”

강원건설건축박람회 개막

강원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한 ‘2024 강원건설건축박람회’가 6일 춘천 불내체육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관련기사 2·7면

강원일보사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4 강원건설건축박람회’는 15회 차를 맞은 강원자치도 내 유일의 건설·건축 자재 분야 전문 종합박람회다. 올해 박람회장은 도내 건설·건축 관련 기업과 기관 간 교류의 장으로 꾸며져 도내 우수 업체, 지자체 등이 60여개 부스를 가득 메웠다.

특히 지난해 처음 연계 개최돼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은 ‘강원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가 올해도 함께 열려 관심을 모았다. 각 기관들의 2024년 사업 계획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도내 우수 신기술을

8일까지 춘천 불내체육관 일원 우수 업체·지자체 부스 60여개 첫날부터 관람객 2천여명 북적 발주계획 설명회 2년째 큰 호응

살펴보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개막 첫날 박람회장은 2,000여명의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허영 국회의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최상순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이왕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전종률 G1방송 대표이사 등 내빈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박람회가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요 확대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올해로 79주년을 맞이한 강원일보사도 참여업체들이 실질적인 경영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해 박람회 개막식에서 건설교통국장을 일으켜 세워 참가업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실제로 박람회 참가업체에게 관급공사 수주 시 자재평가 항목에서 가점 1점을 주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박람회 참가업체들의 관급계약 실적도 2022년 397억원에서 지난해 432억원으로 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증가 폭을 키워 건설업체들이 서로 참여하고 싶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건설은 우리 사회 수많은 종사자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오늘 박람회를 계기로 강원도 건설이 춘천에서 도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지역 건설인들의 경제 활성화 의지를 담은 세리머니도 진행됐다. 내빈들이 무대 위 마련된 터치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축포가 터지며 박람회를 상징하는 ‘G’ 모양 로고가 드러났다.

박람회가 15회를 맞이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귀현 전 도 건설방재국장, 박재희 (주)월드케미칼 대표, 양치호 (주)제이에이치 대표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번 박람회는 8일까지 사흘간 일정을 이어간다. 이 기간 도내 발주기관 10곳이 참여하는 1대1 비즈니스 상담관이 운영된다. 둘째 날인 7일에는 도내 건설 관련 시·군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업무 연찬회가 진행된다. 김현이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3 07 ()

03



질의하는 심오섭 의원 6일 도의회에서 열린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도청 복지보건국 소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심오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江原日報

2024 03 07 ()

03

강원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통과

도의회 사문위 수정 기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주거·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단초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 32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강원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재웅(더민주·춘천) 사회문화위원장은 “지

금까지 가족 중심 돌봄이나 시설에 의존한 돌봄이 대부분이었다”며 “돌봄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도민들, 분절된 돌봄 체계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영근(국민의힘·삼척)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강원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심위원장은 “2022년과 2023년 행정안

전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평가에서 강원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도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대현(국민의힘·화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도 통과됐다. 박대현 의원은 “강원자치도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위탁·대행 사무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심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영욱(국민의힘·홍천)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3 07 ()

15

“영월 텅스텐 광산 재개발 국책사업 전환 필요”

김길수 의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
“국내 반도체산업 10년치 핵심자원”



속한 추진을 위해 광물자원 개발과 육성이 국책사업으로 전환되는 방안도 함께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내의 대표적인 폐광지역인 영월 상동읍 텅스텐 광산 재개발을 통한 핵심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책사업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김길수(영월·사진)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동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 대안 중에 하나는 바로 텅스텐 광산 재가동이며 이를 위해 국가 전략광물가치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동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텅스텐 광맥만 800만에 달하며 이를 채굴할시 수입 없이 국내에서 항공우주와 군사용, 반도체산업 등에 필요한 10년치 전량을 충당하는 규모”라며 “상동광산재개는 단순한 광산 재개발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 핵심자원 생산관리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광석 등분을 가리는 선광장(選鑛場) 건설이 늦어지면 서장기간 지체되고 있다”며 “조

속한 추진을 위해 광물자원 개발과 육성이 국책사업으로 전환되는 방안도 함께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광산 재개발 주체인 캐나다의 알몬티 인더스트리는 2021년부터 경도 굴진은 물론 포르투갈에서 선광장 기술 성능 보증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선광장 건설을 위한 도로와 기존 하천 이설, 기본 및 상세 설계 등을 마무리했다. 때문에 최명서 영월군수도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으며 이관우 부군수도 오는 15일 산자부를 찾아 양정식 석탄산업과장을 만날 계획이다. 알몬티 대한중석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기준

2024 03 06 ()

亞洲經濟

심영곤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심영곤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지정, 그리고 강원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영곤 의원은 "강원도가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하위 등 급인 '미흡'을 받은 만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과 개방 확대를 위해 데이터 행정의 전 영역을 꾸준히 관리해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경제=춘천=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2024 03 06 ()

신아일보

심영곤 의원, 강원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발의

조덕경 기자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영곤 의원(국민의힘, 삼척)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영곤 의원(국민의힘, 삼척)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활성화함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영곤 의원(사진)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와 2023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강원도가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기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공데이터 품질향상과 개방 확대를 위해 데이터 행정의 전 영역을 꾸준히 관리하여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2024 03 06 ()

스포츠서울

김기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지정



[스포츠서울 | 추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6일(수)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2)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평생교육법」이 교육감과 기초 지자체장이 동일한 책무를 갖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의 반영 및 조례 위임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강원자치도교육감이 지정 운영해 온 평생학습관 대상을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새로 정하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법률에 근거해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또는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등 5개의 직속기관과 그에 소속된 17개 분관을 포함해 총 22개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하 의원은 법률 시행이 4월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적시에 개정하여 행정 집행의 원활함을 지원하고 행정변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3월 6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acdcok4021@sportsseoul.com

2024 03 06 ()

경제

김기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지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6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2)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평생교육법'이 교육감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책무를 갖도록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의 반영 및 조례 위임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또는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재 총 22개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 5개의 직속기관과 그에 소속된 17개 분관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또, 김기하 의원은 법률 시행이 4월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적시에 개정하여 행정집행의 원활함을 지원하고, 행정변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3월 6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2일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아주경제=춘천=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2024 03 06 ()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기행위, 이희열 신임기조실장 업무보고

이설화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길수)가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김길수 위원장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립, 도내 인구감소 대응, 신청사 건립 추진 등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길수)가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김길수 위원장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립, 도내 인구감소 대응, 신청사 건립 추진 등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lofi@kado.net

2024 03 06 ()

에너지경제**[포토뉴스]이희열 신임 기획조정실장, 기행위
첫 주요 업무보고**

박에스더 ess003@ekn.kr



▲이희열 신임 기획조정실장이 6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일 이희열 신임 기획조정실장(2월 26일 발령)으로부터 올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았다. 김길수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부임한 이희열 신임 기획조정실장을 환영한다”며 “기획조정실은 강원도정의 컨트롤타워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개발 종합계획 수립, 도내 인구감소 대응, 신청사 건립 추진 등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

2024 03 06 ()

[위클리오늘] 조성운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발의

박종성 기자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의 체계성 확립
조 의원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면학에 전념하는데 도움 될 것"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

[강원 위클리오늘=박종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체계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기숙사 운영학교가 68개교나 있지만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이 2013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학교 기숙사 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 기숙사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 의원은 "지침만으로는 기숙사 운영학교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조례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숙사 운영 기준 마련 ▲기숙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입사학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 ▲기숙사 운영 규정 마련 ▲입사학생 선발 ▲기숙사 관리 및 평가 ▲정보공개 등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사진)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마련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기숙사 관리 및 운영의 체계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면학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성 기자 wknews005@kakao.com

2024 03 06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의 체계성 확립

최남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

[뉴스웨어=최남우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체계성을 갖추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기숙사 운영학교가 68개교나 있지만,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이 2013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학교 기숙사 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 기숙사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침만으로는 기숙사 운영학교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숙사 운영 기준 마련 ▲기숙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입사학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 ▲기숙사 운영 규정 마련 ▲입사학생 선발 ▲기숙사 관리 및 평가 ▲정보공개 등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마련으로, 학교 현장에서 기숙사 관리 및 운영의 체계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면학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 03 06 ()

박대현 도의원, 공공위탁 조례 제정 추진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가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 및 보고, 사무처리지침의 마련, 사무편람 및 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사업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지침 마련과 의회 동의 절차 진행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현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자치도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 위탁·대행 사무들을 당초 예산 심의 전에 의회 동의 및 보고 과정을 도입하여, 해당 사무의 위탁·대행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입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인 강원도정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2024 03 06 ()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박대현 도의원, 공공위탁 조례 제정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정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박대현 도의원

[명성일보=김정현 기자]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가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 및 보고, 사무처리지침의 마련, 사무편람 및 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사업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지침 마련과 의회 동의 절차 진행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현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자치도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위탁·대행 사무들을 당초 예산 심의 전에 의회 동의 및 보고 과정을 도입하여, 해당 사무의 위탁·대행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입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인 강원도정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 03 06 ()

江原日報

정종성 화천문화원장 취임식



정종성 제13대 화천문화원장 취임식 및 이화영 제11, 12대 화천문화원장 이임식이 6일 화천군 여성회관에서 최문순 군수, 한기호 국회의원, 노이업 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종성 제13대 화천문화원장 취임식 및 이화영 제11, 12대 화천문화원장 이임식이 6일 화천군 여성회관에서 최문순 군수, 한기호 국회의원, 노이업 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종성 제13대 화천문화원장 취임식 및 이화영 제11, 12대 화천문화원장 이임식이 6일 화천군 여성회관에서 최문순 군수, 한기호 국회의원, 노이업 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천 정종성 제13대 화천문화원장은 “55년의 전통을 이어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6일 군여성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화원을 개방적인 공간, 환영하는 공간,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군민에게 문화와 예술의 즐거움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문순 군수는 축사에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지역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 군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에는 이화영 제11, 12대 문화원장 이임식도 함께 열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문순 군수, 한기호 국회의원,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이화영 군노인회장, 박주선 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17개 시·군 문화원장, 문화예술인, 기관·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도민일보

지역소멸 '바로미터' 폐교 발생 시계가 빨라진다

강원 통폐합 논의 가능 19곳

학령인구 매년 감소 학교 위기

5년간 초 1학년 2000명 ↓ 전망

신 교육감 "지역사회함께 고민을"

앞으로 5년간 초교 1학년 학생 수가 2000명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학령인구 급감에 지역 존립이 위태롭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6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강원도내 통폐합 논의 가능 대상 초교는 총 19곳(본교 9교, 분교장 10교)이다. 지역별로는 춘천·삼척·양양·횡성·정선 각각 3곳으로 집계됐고, 홍천·평창·화천·고성에도 1곳씩 있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0명 이하 본교, 또는 전교생이 5명이하인 분교장을 통폐합 논의 가능 대상으로 삼는다. 단 대상에 포함된 모든 학교가 즉각 통폐합 추진에 돌입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해당 기준에 부합한 도내 초교는 23곳이었다.

매년 학교가 존폐위기에 내몰리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어둡다. 향후 5년간 강원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000명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9206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당국의 중장



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이듬해인 2025년에는 8643명을 기록해 올해보다 563명 감소할 예정이다. 하락세는 계속돼 2027년에는 8020명으로 8000선 하락을 목전에 두고, 2028년에는 7318명에 그쳐 올해 대비 1888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5년 사이 올해 신입생(9206명)의 5분의 1이 증발하는 셈이다.

도내 올해 초·중·고 학생 수는 도교육청이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인 13만988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25만2800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는 2013년 19만4543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14만8634명으로 집계되며 15만명 선이 무너졌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4만명대가 붕괴한 13만9888명을 기록했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해서는 11만2913명 감소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위기감을 느낀 교육당국은 지역사회에 문제해결에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신경호 교육감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없어지고, 지역이 소멸된다"면서 "교육쪽에서 학교 경영을 잘해야겠다는 남다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학교 경영은 도민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지자체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민영

江原日報

정선 '유치원 초·중·고' 우유 무상 급식 박차

【정선】정선군이 지역 학생들의 고른 영양 섭취와 지역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2024년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자해 유치원 2개소, 95명을 비롯한 초·중·고교 35개소, 2,404명을 대상으로 우유 무상 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상 급식에 사용되는 우유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우유

3억5천만원 투입 ... 치즈·발효유 등 주 2회 이내 제공
매 분기별 공급업체 지도·관리 실시 위생 점검 병행

이며, 학교 여건에 따라 국산 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치즈나 발효유 등도 주 2회 이내로 제공할 예정이다.

학기 중 우유 급식의 경우 공급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우유의 안전성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급식 시간을 지정, 담임교사 지도 아래 제공

할 방침이다. 또 방학기간에는 공급업체와 학교장이 협의해 우유 급식 신청 학생의 가정으로 택배를 이용해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군은 안전한 우유 급식을 위해 매 분기별로 우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관리를 실시

하고, 대상 품목 공급 여부 및 위생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우유 급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다양한 영양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창민 군 유통축산과장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 증진은 물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우유 무상 급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2024 03 07 ()

강원도민일보

04

도-교육청 ‘러닝메이트제 도입’ 첫 논의부터 온도차

강특별 개정안 특례 반영 추진
신 교육감 “교육자치 보장 우선”
도 “기관 간 추가 논의 필요”

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특례 제출권이 도에 있다 보니 교육청이 내려라마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교육자치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범 도입 특례 반영을 추진(본지 2월 16일자 2면)하는 가운데 도와 도교육청이 첫 논의 테이블부터 이견을 드러냈다. 도는 러닝메이트제를 3차 개정안에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도교육청은 “교육 자치권 확보가 우선”이라고 일축, 특례 개정을 앞두고 지자체와 교육당국 간 주도권 싸움이 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경호 교육감도 “러닝메이트제 전제 조건은 교육자치 보장”이라며 조건을 내걸었다. 신 교육감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치르며 교육감 선거의 낮은 인지도를 직접 경험했다. 교육의 자치성이 보장되는 제도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이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대로 가야 한다. 예산이나 교사 인사 등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5일 실무진이 만나 처음으로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러닝메이트제가 담긴 3차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도가 고려 중인 러닝메이트제 방식으로는 △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 지명 후 지사 선거만 진행 △지사-교육감 후보 동반 입후보 후 각각 선거 △지사-교육감 후보 정책 연대 등이 언급된다.

도교육청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현행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도와 논의한 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자치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육감 감정이 선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우선 도민의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실제 제출까지는 기관 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도와 교육청이 충돌 중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민영

2024 03 07 ()

江原日報

14

“장성광업소 갱도 수몰 반대” 대정부 투쟁

【태백】태백지역 사회단체가 올 6월 폐광 예정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광해복구 대책인 갱도 수몰 방식에 반대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태백시민 대체산업 육성 위해 광산 시설물 활용 주장
대책위 현수막 게첨... 11일 성명 발표·건의문 발송 예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주한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 대책’ 수립 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문을 닫은 화순탄광과 올 6월 폐광하는 장성광업소는 경제성을 이유로 갱도에 지하수

를 채워 넣어 지반 침하나 붕괴 등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대체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폐갱도 등 광산 시설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곳에 갱도 수몰 반대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황지연못,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지사, 세종정부청사 등에 집회신고를 마쳤다. 또 오는 11일 갱도 수몰 반대 성명서 발표 및 산자부, 기재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 대한 건의문 발송 등을 예고했다.

이 등을 통한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뚜렷한 답변이 없으면 폐광 시작일부터 주민 릴레

현대위는 이를 위해 8일 오전 11시 회관에서 긴급 집행부회의를 갖고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김주영 현대위 위원장은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희기자 kw635@kwnews.co.kr

2024 03 07 ()

강원도민일보

04

2학기부터 늘봄학교 행정 공무직 채용 검토

도교육청, 행정업무 이관 방안 논의
기간제교사 채용 난항 “이번 주 완료”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교사 채용에 애를 먹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늘봄학교가 확대 시행되는 올해 2학기부터는 공무직에게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본지 취재결과 1학기 84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내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도내 전체 초교로 확장된다. 현재 강원도내 초교는 총 347곳이다. 1학기에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늘봄학교 업무를 맡겼으나 2학기부터는 공무직에게 행정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지만 늘봄실무사(가칭)라는 행정 공무직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검토하고 있다”면서 “늘봄실무사는 행정업무능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채용 기준을 고민할 계획”이

라 밝혔다.

당장 2학기부터는 전체 초교로 늘봄학교가 확대되나 이제 막 받을 땐 늘봄학교는 인력 충원이 완료되지 않아 개학 이후에도 뼈적이고 있다.

원주 A초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맡을 외부강사 모집에 열을 올렸으나 개학 이전 채용에 실패했다. 다음주는 돼야 강사가 출근할 예정이어서 개학 첫 주에는 교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늘봄에 투입되고 있다. 홍천 B초교 역시 입학식에서 학부모들에게 늘봄학교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돌봄은 이번 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나 이외 프로그램은 다음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은 6일 “미채용된 기간제교사는 이번 주 안으로는 다 임용될 예정”이라며 “늘봄학교는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됐다. 늘봄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적어도 학원 1~2개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정민업

江原日報

2024 03 07 ()

10

춘천시내 ~ 기업혁신파크 가는 길 편해진다

【춘천】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은 남산면 일대와 기존 도심에 있는 도로망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정부가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5개 노선 사업 반영을 신청했다. 시가 건의한 노선 중 국도 5호선 동산면~북방면 18km 구간과 국지도 86호선 동산면 조양리~군자리 3.8km 구간은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준

시 정부 국도·국지도 계획에 5개 노선 사업 반영 신청
남산면 일대 도로망 개선 혁신파크 선정 땐 접근성 확보

비 중인 남산면 광관리 일원과 연결되는 도로다.

양 구간이 4차로 확장과 선형 개량을 마치면 석사동·동내면 도심지 및 홍천군과 남산면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온의동, 근화동 등의 도심지에서 남산면으로 향하는

국지도 70호선과 통행량 분산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동내면 일대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과 다원지구, 학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정주 인구가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준비 중인 남산면 광관리 일대는 서

울~춘천고속도로 남춘천IC와 인접해 서울 40분대 도착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춘천 도심 연결성은 보완이 필요하다. 육동한 시장 역시 지난 5일 언론 간담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정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확정될 경우 춘천시내와 철도역 간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

획은 국토교통부가 올 1월 1차 심사를 마쳤다. 이어 추가 심사를 통해 일괄 예타 대상 사업을 추려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에 조사를 의뢰한다. 최종 선정 여부는 내년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국도 5호선, 국지도 86호선 외에도 서면 안보리~방동리 우회 4차로 신설, 서면 금산리~신매리 4차로 확장, 동내면 우회 4차로 신설 등의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3 07 ()

09

“소양강댐 물 뺏길라” 방어 나선 춘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수원 거론
가용 용수 파악·대응책 발굴
시 “댐 피해 주민 반감 우려”**

속보=정부가 화천댐 용수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로 결정(본지 2월26일자 2면)하자 춘천시가 소양강댐 지키기에 나섰다. 원주에 들어서는 강원형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처로 소양강댐이 꾸준하지 못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최근 K-water 측에 문의, 소양강댐 용수 계약률과 가용 용수 규모를 확인하고 소양강댐 용수가 강원형반도체 클러

스터로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현재로서는 소양강댐 용수가 가능성 중 하나로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이후 진행상황이 구체화되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 발굴에도 나섰다.

춘천시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화천댐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처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화천댐 용수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로 공급하는 안이 담긴 1차 댐관리기본계획을 지난달 의결했다. 환경부는 단기 방안으로 팔당댐 여유수량을 끌어다 쓰고 장기 방안으로 화천댐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화천댐 용수가 용인반도체 클러스

터에 사용되자 춘천시도 다급해졌다. 춘천시 관계자는 “화천댐 물을 용인에 쓴다는 말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말 그렇게 결정할 줄은 몰랐다”며 “소양강댐 역시 강원형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처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더욱이 강원도가 강원형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화천댐을 주수원으로 쓰고 소양강댐을 보조수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이어서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춘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강원형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소양강댐의 용수 계약률이 96%에 달해 가용 용

수가 4%에 불과한데다 80km에 이르는 수로건설에만 3000억원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소양강댐 용수를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재까지 춘천시 판단이다.

춘천시 입장에서 소양강댐 용수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춘천시는 K-water와 물값 지급 여부를 두고 20여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또다른 춘천시 관계자는 “지금도 소양강댐 물을 돈을 주고 써야 한다는 점에 반감을 갖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춘천이 오히려 감당하고 정작 물은 다른 지역에서 쓴다고 하면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3 07 ()

10

원주 지정면 인구 3만명 돌파 신도심 탄생

**소규모 농촌→기업도시 변모
신규 아파트 호재 5년새 '9배'
원주 전체 인구 증가세는 주춤**

원주에 또 하나의 인구 3만명 이상 신도심이 탄생했다.

원주 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말 기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정면 인구가 전말 대비 65명 늘어난 3만 11명으로 3만명선을 넘어

섰다. 이에 따라 원주내 인구 3만명 이상 지역은 반곡관설동(4만 7172명), 단구동(4만 3163명), 무실동(3만 5434명)에 이어 지정면 가세로,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

지정면은 전형적 소규모 농촌지역이었으나 기업도시가 조성되며 인구 증가세가 고공행진을 거듭, 신흥도심으로 자리잡았다.

지정면 인구는 2018년 6월 3180명에서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19년 1월 1

만 657명으로 6개월 사이 7000여명 증가하며 인구 1만명선을 넘어섰다. 또 1년 후인 2020년 1월 2만 1532명으로 인구 2만명선을 뛰어넘었다. 이어 4년여 만인 2024년 2월 3만 11명으로 3만명선을 돌파했다. 약 5년새 9배가 넘는 인구 증가다.

올 상반기 중 1500여세대 신규 아파트 1곳의 입주가 시작되고, 최근 기업도시내 오피스텔 용지에 아파트 신축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지정면 인구 증가세는 당분간 더 지속

될 전망이다.

반면 장기 지속돼 온 원주 전체 인구 증가세는 주춤되고 있다.

원주 인구는 2014년 6월부터 매달 지속 증가하다 2023년 3월(-181명) 8년 10개월만에 처음 감소하는 등 2023년 한해 인구 증가 규모(696명)가 전년 대비(3050명) 77% 크게 줄었다. 이어 2024년 1월(-5명), 2월(-39명) 등 인구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태욱 tae92@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3 07 ()

/ 19

강원 철도 국가사업 관철돼야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앞당길 핵심 과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중 하나인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도로와 철도 연결은,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토대로 신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도가 12조 5000억원 규모 철도 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총력전이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철도노선 개선은 특별자치도 성패를 좌우할 사안 만큼, 도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이 더해져 조기에 가시화하기를 바랍니다.

도가 추진하는 철도망 계획은 도내 물론, 타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는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일반철도 7개 사업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각 노선은 도내 철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됩니다. 철원군과 원주시, 춘천시를 관통하는 원주~춘천~철원 철도는 영서와 영동을 잇는 '격자형 순환 철도망'을 구축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등 남부 권역과 직결돼 한반도 중앙을 종단하는 내륙 물류 축으로도 기능할 전망입니다.

제천~평창 철도는 중부 내륙과 강원

도를 이어 기존 100km에 달하는 이 구간 거리를 절반으로 단축합니다. 제천~삼척 고속화 사업은 강원 남부 지역과 도내 고속교통망을 30분 내 연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원선 연천~철원 전철화는 강원 북부 관광 수요를 늘리고, 평창 사북철도 고속화 사업은 정량리와 정선 구간을 1시간 대로 연결하는 등 강원 남부권의 교통망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고성 연결선과 춘천~속초 철도는 동해안 항만과 연계한 미래 화물 물동량 확보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업인 GTX-B노선 춘천 연장선과 GTX-D노선 원주 신설 사업은 강원도의 광역 수도권화를 견인할 교통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GTX-B노선의 춘천 연장 총사업비는 최대 4238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강원지역 철도망 건설에 대한 당위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결단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강원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토 균형발전도 요원해집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혜택을 얻기 위해서 도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07 ()

/ 19

상가 임대료 연체율 2배 많아 우려

-타시도보다영업 부진심화,상생제·바우처 등보호 필요

강원지역 소상공인 5명 중 1명은상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무려 2배나 높 은 연체율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 에 영업 부진으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 에 더 심각하게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 는 암울한 수치입니다. 타 시도보다보 증금과 매달 내는 월세·관리비가 낮은 도 전국 상위권의 연체율을 보이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증 한 것으로 임대료 부담을 더는 다양한 지원책이 실행돼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강원을 비롯해 전국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표본조사한 2023 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도내 상가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2151만원으로 전국 평균 3010만원 보다 낮습니다. 제주, 전남에 이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103만원으 로 이 역시 제주 전남에 이어 세번째로 낮아 17개 시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반면 임차인의 월세 연체 경험률은 상위권입니다. 전국 평균은 10%인데 강원은 전남, 경남에 이어 전국 세번째 로 높은 20%의 연체율을 보입니다. 상 시근로자 4인 이하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학원과 같은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과 상시 9인 이하 제조업종에 속하는 상 가건물대상 조사이기에 웬만한 소상공인 형편을 대변하는 수치입니다.

강원소상공업계에서는 대출도 다 갚지 못해 허덕이는 경우가 많은 상황 이라며 수년에 걸쳐 힘든 시기에 놓여 있음을 토로합니다. 사회적 재난을 당 했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임차인 과 임대인 모두 '착한 임대인' 등과 같 은 임대료 상생제도를 가장 많이 요구 했습니다. 임대료 상생제 시행에 대해 임차인은 무려 73%, 임대인 59%가 요 구했습니다. 임대료 연기제도, 임차인 해지권 확대, 차상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바우처 등 여러 정책 시행을 요 구합니다.

또한 영업 부진이나 임대인의 과도 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 하지 못해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 치는 임차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 대인으로부터 과도한 원상복구 및 수 리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부당 요구사 례로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특 히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율 5%를 3% 로 낮추는 것이 적정하다는 임차인 형 편을 살펴야 합니다. 타 시도보다 임대 료 연체율이 높아 비용 고통을 호소하 는 강원소상공인에 대한 경감 조치가 가시화돼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3 07 () / 19

의대 증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전환점 돼야

정부는 지난 5일 총 40개 대학에서 2025학년도에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목표 2,000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각 대학이 초안으로 제출한 최대 2,800여명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의료계의 증원 신청 자제 요청에도 대학 총장들이 앞다퉀 증원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4개 의과대학은 200명의 정원 확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각 대학이 공개한 증원 규모 164명보다 36명 많은 것이다. 그러나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실제 교육 여건과 교수 인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원을 신청했다며 항의하는 등 내부 반발까지 터져 나와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의대 교수와 학생, 의료계의 반발에도 대학들이 예상보다 크게 의대 증원 수요를 늘린 것은 열악한 지역·필수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과 학교 경쟁력 제고를 충분히 감안한 선택으로 보인다. 의대 규모가 커지면 학교의 위상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대 정원 배정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의대 순위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나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지역 소멸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이미 절반도 넘는 118곳이나 된다(2023년 9월 기준). 심지어 차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분만실이 없어 응급 대응이 어려운 분만 취약 지역도 100여 곳

이 넘는다. 임신부가 산부인과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원정까지 가야 한다. 이런 필수 의료인프라부터 구축해야 지방 소외를 풀 수 있다.

지방에 살아도 성장의 기회와 행복할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몰린다면 의료 위기 해결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실질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1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난다. 지금도 한참 늦었다는 얘기다. 당장의 진료 공백을 메울 단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40개 대학, 2025학년도 3,401명 신청
학교 위상 등 감안 비수도권대 비율 72%”
분만 취약지 전국적으로 100여곳 넘어**

江原日報

2024 03 07 ()

/ 19

폭설에 산양 폐죽음, 긴급 구호 대책 시급하다

강원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인 산양 277마리가 폐죽음을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7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15cm의 눈이 또다시 예보되면서 폐사하는 산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의 한 민가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산양 4마리가 탈진한 채로 집 근처까지 내려와 무, 봄동 등의 먹이와 식수를 매일 공급했으나 결국 4마리 중 3마리가 폐사했다. 울겨울 폭설로 양구, 화천, 인제 미시령·한계령, 고성 진부령 일대에서도 먹이를 찾아 민가와 도로까지 내려왔다가 죽은 산양들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겨울철(11월~이듬해 2월)에 폐사 신고가 접수된 산양은 총 69마리에 그쳤다. 하지만 폭설이 잦았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사 신고된 산양은 무려 277마리로 크게 증가했다. 강원 산간지역에는 최근 한 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폭설이 내렸다.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인 설악산 등에서 산양들의 생존 환경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산양 개체 수는 2,000여 마리였다. 손장의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장이 보고되

지 않은 폐사 개체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에만 전국 산양 개체 수의 10% 이상이 폭설과 저온 현상으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추산할 만큼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주민들은 경계심 많은 산양이 떼 지어 민가나 도로 변까지 내려온 것은 처음 본다 고 했다. 더 이상 산양이 희생되지 않도록 긴급 구호 방안을 세워야 한다. 기후 변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산양들이 몇 차례의 먹이 주기 행사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요행이다. 서식지 환경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개체 수 파악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산양 보호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폭설 등에 대비한 산양 보호소 설치나 관리인, 의료진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산양은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해 있었다. 하지만 1950~1960년대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군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해 멸종위기에 처했다. 산양은 2002년 환경부의 산양 서식 실태 조사 결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600~700개체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종 I 급으로 지정됐으며 2007년 산양 복원 계획이 추진되면서 간신히 그 수가 불어나고 있다. 또다시 방치하다 부랴 부랴 증 복원한다고 허둥댈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